

韓國 資本主義의 變化와 連續

崔 龍 浩* · 嚴 昌 玉**

〈 目 次 〉

- I. 서론
- II.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接合'
- III. 한국 자본주의의 展開
- IV. 變化와 連續 : 1980년대를 중심으로
- V. 결론

I. 서론

A. G. Frank는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을 '變化 속의 連續', '連續 속의 變化'로 정리한 바 있다¹⁾

그것은 주변부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내적 '變化'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계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규정받는 '連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變化'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주어진 구조 안에서 그 영속적 특징을 '連續'의으로 물려받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를 근대화적 進化論으로 정리하든지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강사.

1) A. G.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1967, Monthly Review Press.

혹은 段階論으로 정리하든지간에 기존의 논의는 變化의 논리와 連續의 논리를 동일한 논리 선상에 놓고 분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전자는 변화의 논리에만 편중되어 있다면, 후자는 변화를 관류하고 있는 연속의 논리에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변화와 연속을 동일 선상에 놓고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절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중심부 자본주의로부터의 탈종속의 가능성과 ‘연속’이라고 하는 중심부 자본주의의 주변부 규정성을 「세계체제론」과 「접합이론」으로 시론적으로나마 정리해 보고²⁾, Ⅲ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계적 국제분업구조가 주변부 자본주의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도구가 되는 반면에, ‘국가간 체제’ 내의 주변부 국가와 국내·외 계급동맹은 주변부의 변화를 시도하는 동학(전략)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주변부 자본주의의 동학은 연속과 변화의 변증법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우리는 이상의 논리에 따라 1980년대 초반(1982년경)을 한국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위치이동한 시기로 정리하고, 이 시기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와 연속을 검토함으로써 이 위치이동의 ‘연속 속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러한 ‘연속’의 구조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중심부로 이동하는 ‘변화 속의 변화’를 위한 전략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Ⅱ. ‘資本主義 世界經濟’로의 ‘接合’

1. ‘資本主義 世界經濟’의 成立과 帝國主義의 擴張

I. Wallerstein에 의한 1450년-1540년경 유럽경제의 분석 결과는 북·서유럽-동유럽-러시아 변경·아프리카 북부·서인도제도·라틴아메리카 일부 등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世界經濟’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세계경제는 換金產品을 생산하기 위해 임금노동에서부터 노예노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勞動統制形態를 포함하는 位階的 國際分業構造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2) 本多健吉, “世界經濟システム論と接合理論”, 『經濟學雜誌』, Vol. 89, No. 1, 1988. 5.

지적하고 있다. 이 분업구조는 소위 ‘中心部-半周邊部-周邊部’의 三極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剩餘價値의 生産과 實現을 위해 新原料地/新市場/新勞動力 供給地 등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地理的 領域의 膨脹을 요구하고 있다.³⁾

그는 이러한 膨脹이 帝國主義的 屬性을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계적 국제분업구조의 중심부에서는 임금노동에 의한 생산이, 주변부에서는 노예노동 및 再版農奴制 下에서의 隸屬農 등 強制勞動에 의한 생산이, 그리고 반주변부에서는 混合的 勞動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지역간 勞動統制樣式의 차이가 地理的 領域의 膨脹 過程에서 國際的 不均等交換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經濟剩餘 收奪構造를 구조적으로 再生産하고 있다는 점 등에 있다. 이것이 I. Wallerstein이 암시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世界的 規模의 下部構造’인 것이다.⁴⁾

한편으로는 ‘長期의 16世紀’에 형성된 이러한 世界經濟가 世界帝國(Empire)으로 轉化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특징이다. 그것의 대개고리는 그에 의하면 ‘市場’이다. 세계제국은 세계경제를 하나의 통치기구로 묶는 거대한 지배기구를 갖는 단위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제국은 너무나 성가시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한 관료제 사회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관료제는 당시의 세계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原始的인’ 統治機構로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로 世界帝國은 制度的 比較優位를 喪失한 것이다.

“정치적 帝國은 원시적 지배수단이다. 그와 같이 너무나 성가신 정치적 상부구조의 쓸데없는 것을 제거하고 사회의 하층에서 상층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다수자에서 소수자로 향하는 잉여의 흐름을 더욱 증가시키는 기술은 근대세계가 성취한 하나의 발명이다.... 근대세계는 剩餘轉有의 원천으로 전례 없이 효율적인 방식, 즉 市場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정치적 지배기구로서의 제국은 사라지고, 개별 근대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결국 시장을 매개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간의 상호 역학관계

3) I. Wallerstein, *The Morden World-System*, 1, AP, 1974.

4) C. Chase-Dunn, *Global Formation: Structures of the World-Economy*, Basil Blackwell, 1989.

가 경제적 잉여의 흐름을 규정하는데, 그는 이것을 ‘國家間 體制(Interstate-System)’로 命名하고 있다. 국가간 체제가 곧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世界的 規模의 上部構造’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 내에서의 근대국가는 비로소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국가가 세계경제의 위계적 분업체계 속에서 그의 分業的 地位(position)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중심부는 세계경제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경제의 지역적 팽창을 시도하려면 經濟的 / 軍事的 / 政治的 優位力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중심부 혹은 霸權國으로서의 地位를 상실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팽창에 새로이 포섭되는 주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지배력에 아무런 대응력을 갖지 못한 주변지역은 위계적 국제분업의 下位 序列을 담당하면서 世界的 規模의 資本蓄積에 봉사하게 된다.

또한 資本蓄積의 速度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것은 각국의 文化・國內 階級的 同盟・國家權力에 의한 國民的 動員力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자본축적의 가속화로 위계적 分業序列의 地位를 移動하려는 시기에 있어서의 국가권력은 강력해진다. 중심에서 패권국으로, 반주변에서 중심으로, 특히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의 이동 시에 국민국가의 국민 동원력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2. 周邊部로의 接合과 資本主義의 深化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팽창으로 世界經濟 外廓地域은 주변부로 統合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확장에 의한 새로운 외곽지역의 分業的 統合을 ‘接合’(articul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곽지역의 생산양식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역할에 따라, 동시에 주변지역의 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變形을 받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생산양식, 예컨대 勞動統制樣式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중심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賃勞動에서부터 封建農奴的 勞動, 強制된 奴隸勞動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⁵⁾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경제가 지리적으로 팽창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외곽지역의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접합할 때 생산양식 전체가 동시에 접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P. P. Ray는 특정의 사회구성체는 경제적 水準(Instance)과 정치적 水準 그리고 문화적 水準이라는 서로 다른 水準의 측면들이 接合된 複合的 構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 세계경제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궁극적으로 주변부로 하여금 중심부의 자본축적에 봉사하도록 하는 超過搾取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경우, P. P. Ray의 지적이 가지는 의미는 중심부 생산양식은 주변부 생산양식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經濟的 剩餘를 收取해 낼 수 있는 특정 '水準'과의 接合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외곽지역은 자본주의와의 접합으로 인해 각 水準간의 불균등한 資本主義化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내 생산양식의 각 水準간의 畸形化된 接合 혹은 脫骨的 接合(dis-articulation)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현상이 戰後 帝國主義에서 해방된 新生獨立國의 공통된 후유증임을 보아도 이 논리는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생산양식간의 접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접합론에 따르면 중심부는 주변부를 통합하여 경제적 잉여를 효율적으로 수취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주변부의 前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溫存・保護하다가 필요에 따라 변화시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중심부의 의도대로 주변부의 생산양식이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심부의 자본과 주변부의 지배계급간의 (그들 특유의) 階級同盟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접합이론가들은 세계경제 확장에 의한 被統合地域에 대한 세계경제의 일방적 결정성만이 아니라 피통합지역의 內在的 對應이 피통합지역의 사회구조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Poster-Carter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5) Dobb-Sweezy의 고전적 논쟁을 출발로 1950년대의 일본자본주의 성격논쟁,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 성격논쟁의 경험은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확장에 의한 주변부 생산양식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에컨데 알튀세르와 발리바는 생산양식을 '생산력 관련과 생산관계 관련에 의해 이중적으로 접합된 복합적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7) 독일어로 '접합'을 gleiderung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부학적 관점을 조심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팽창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주변부) 사회구성체의 성격이 자본주의의 動學만이 아니라 前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의 動學도 함께 나타난다는 점, 즉 그 사회구성체는 그것들의 接合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은 완전히 진실이다.”⁸⁾

P. P. Ray는 중심부의 資本主義 生産樣式과 周邊部の 非資本主義 生産樣式間에 일어나는 接合의 내용 변화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는 交換領域에서의 接合이다. 자본주의와의 상호작용이 초기에는 오히려 비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강화한다. 둘째로는 특정 水準에는 자본주의적 부문이 정착되고 비자본주의적 부문을 예속시킨다. 그러면서 前者는 後者를 계속 이용한다. 셋째로는 농업부문까지도 자본주의화함으로써 非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을 總體的으로 消滅시켜간다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주변부 개별국가가 자본주의와 접합하고 심화해 가는 과정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동맹에 의해 성격지워지며, 동시에 위계적 국제분업체계에서의 지위를 변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시론적으로나마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재검토하고, 그 속에서의 변화와 연속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Ⅲ. 한국 자본주의의 展開

1. 資本主義 世界經濟에로의 接合期(일본 자본주의의 주변부 : 1876-1945)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 기점에 관한 논의는 經濟史學界의 해묵은 쟁점이었다. 한국의 자본주의 성립 기점을 萌芽論的 觀點에서 18세기 중엽으로 잡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배적 경향을 중심 시각으로 하여 1930년대로 잡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世界體制論的 觀點에 서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팽창으로 인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한국 사회가 접합한 시기는 開港期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전화하기 시작한 것

8) A. Poster-Carter, "Can We Articulate Articulation", John Clammer(ed), *The New Economic Anthropology*, MacMillan Press, 1978.

9) P. P. Ray "The Lineage Mode of Production, Critique of Anthropology", *Economy and Society*, Vol. 2, No. 3, spring, 1975.

으로 보인다.

개항 이후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최초로 접합된 부문은 交換領域이었다고 생각된다. 開港場에는 日商과 淸商이 상주하였고, 인천항에는 歐美商船도 선을 보였으며,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조선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朝·日合邦 후에는 일본계 은행의 지원에 의한 일본 상인의 세력확보가 팔목할만 하였다. 당시 한국계 상인세력은 미미하게나마 존재하였지만, 민족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축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당시 일본 자본주의의 내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産米増殖運動」이 실시되었는데, 그것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비약적인 공업발전을 이룩하면서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單純 農業 勞動力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1911년 「朝鮮會社令」을, 1912년에 「土地調査令」을 공포한 것도 일본의 식량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일본 내의 저임금 노동자의 확보를 위해 한국의 封建的 農業이 온존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양대 정책은 일본이 조선의 공업화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조선을 전형적인 식민지 농업지역으로 만들어 일본자본주의 운동을 위한 위계적 하부 분업구조로 접합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表 1〉日帝下 階層別 農家戶數의 動態

(單位: 戶, %)

年度	地主	自作農	自家小作農	小作農	計
1914	46,754	569,517	1,065,705	911,261	2,593,237
	1.8	22.0	41.1	35.1	100.0
1919	90,386	525,830	1,045,606	1,000,003	2,664,825
	3.4	19.7	39.3	37.6	100.0

資料: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33년, 金文植, 韓昌浩, 『日帝의 經濟收奪史』, 27쪽 재인용.

조선의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변형시킨 전형적 예는 「土地調査事業」이었다. 식민지시대의 토지조사사업은 형식적으로는 토지소유의 근대적 기초를 확립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를 실체화함으로써 總督府의 土地稅收의 확보, 國有地 확보를 통한 財政 확보의 기초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封建的 農民의 土地保有者 性格을 小作農으로 轉落시켜 農業部門을 半封建的

으로 變化시키는 정책이었다. 그것은 <表 1>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日本人 地主의 증가와 朝鮮人 小作農의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당시 일본을 통한 資本主義와의 接合은 前資本主義的 朝鮮을 近代化시키는 方向이 아닌, 溫存과 變形의 方向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다.

1920-30년대의 한국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의 특성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당시 일본은 獨占資本主義 단계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따라서 제국주의적 資本輸出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920년 4월을 기해 그때까지 朝鮮 國內의 工場建設을 제한해 오던 朝鮮會社令을 철폐하고, 일본 내 過剩資本의 본격적인 對朝鮮 進出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1930년대 후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의 軍部와 신흥 재벌과의 유착에 의한 침략전쟁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공업은 軍事的 再編成에 들어가게 되고 중화학공업과 금속공업으로의 구조변화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朝鮮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접합기(1876-1945)에는 제국주의 전쟁의 병참기지로서의 分業的 所任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朝鮮은 農業國家이면서도 1939년부터는 광공업의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공업 내부적으로는 식품공업이 쇠퇴하고 화학공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表 2>는 이러한 일본 독점자본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중화학공업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 내 軍需工業에 원료를 제공¹⁰⁾하기 위한 位階的 國際分業으로의 포섭의 결과인 것이다.

조선의 이러한 공업화가 日本 獨占資本의 過剩資本의 對朝鮮 直接投資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조선의 민족자본 육성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조선을 오히려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온존시키려는 총독부의 정책은 역력했다. 예컨대 1942년경부터 실시된 「中小企業整備令」이 그것이다. 이 정책에 의해 중소 민족자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잔존 세력은 大地主나 大商人資本이 主流였다. 물론 일본의 요구가 그대로 조선에 실현된 것은 아니다. 歐美-日本-朝鮮이라는 위계적 국제분업구조에 접합하는 조선의 경제구조가 이처럼 유통부문에서의 자본주의와의 접합과 생산부문에서의 전

10) 안병직, '일제 식민지의 경제적 유산과 민족해방의 의의', 박현채 외 3인 편, 『한국경제론』, 까치, 1987년, 20-30쪽 참조.

〈表 2〉 1930-40년대 朝鮮 工業構造의 變化

(單位: 千圓)

部門	1930年	%	1936年	%	1943年	%
紡織工業	835,574	12.8	90,378	12.7	345,000	17.0
金屬工業	15,263	5.8	28,365	4.0	300,000	14.0
機械機具工業	3,328	1.3	7,398	1.0	115,000	6.0
窯業	8,348	3.2	19,032	2.7	90,000	4.0
化學工業	24,676	9.4	162,462	22.9	605,000	30.0
製材 및 木材	7,037	2.7	19,230	2.7	120,000	6.0
印刷 및 製本	8,184	3.1	12,426	1.8	24,000	1.2
食料品工業	152,054	57.8	320,580	45.2	400,000	19.0
瓦斯 및 電氣	6,432	2.4	39,983	5.6	30,000	1.7
其他工業	4,068	1.5	10,000	1.4	22,000	1.1
合計	262,062	100.0	709,865	100.0	2,050,000	100.0

資料: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1942, p. 223.

자본주의의 온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일본의 요구에 대한 조선의 계급적 대응의 결과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한국 자본주의는 팽창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일본을 경유하여 流通部門 및 政治的 部門에서 接合하면서 展開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반주변부인 일본을 경유하는 이중(二重)의 압력이었으며, 그만큼 超搾取의 強度는 강했다고 평가된다.

2. 資本主義로의 接合 深化期(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 1945-61)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美軍政의 「農地改革」과 「歸屬財産 拂下」로 인해 한국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접합이 經濟的 水準으로까지 심화되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중상주의적·정치적 식민지시대가 끝나고 경제적 식민지시대로의 전환의 결과이며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의 외압으로 존재하던 일본 자본주의가 미국 자본주의로 대체되었다는 연속적 구조 속에서의 변화일 뿐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位階的 分業構造는 매우 견고하였으며, 당시의 이 위 계구조를 넘어서는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 국가도 없었다.¹¹⁾ 일본의 이

11) G. Arrighi & J. Dangel, "The Stratification of the World-Economy: Exploration of the Semiperipheral Zone", *REVIEW*, Vol. 5, No. 1, pp. 9-74.

러한 변화 역시 세계경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냉전 시대의 도래가 그것이다. 이 결과 한국 자본주의는 더 견고한 국제분업구조 속으로 깊숙히 편제되어 갔다.¹²⁾ 이것은 한국의 全領域에서 資本主義化 (generalization)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국내의 계급적 대응은 農地改革과 歸屬財産 拂下를 계기로 한 국내 산업자본의 형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9월 [韓·美 政府間の 財政 및 財産에 관한 最初 協定]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귀속재산은 기업체 2,203건, 부동산 287,555건, 기타 2,151건이었다. 이것을 ① 優先權 附與 賣却, ② 指名 公賣, ③ 一般公募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귀속재산은 土地와는 달리 實際 占有者가 없는 것이 많았던 만큼 해방 이후의 管理者를 중심으로 緣故主義에 따라 優先權 賣却의 방식으로 대부분 처리되었다¹³⁾.

한국의 농지개혁 역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식민지시대의 조선의 농업부문은 前資本主義的으로 溫存-維持됨으로써 超過搾取가 일어났던 부문이다. 그 결과 해방 후, 초과착취의 대상이었던 농업부문은 反資本主義 運動의 根據地가 되었고, 社會主義 運動의 源泉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다. 美軍政이 2차대전 후 세계경제의 냉전질서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농지개혁을 실시했던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외압이 매개고리 없이 그대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당시 미군정에 의한 「南北土地改革法案」은 주지하듯이 韓民黨 등의 地主階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현을 보지 못하고, 오직 歸屬農地에 대해서만 有償分配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 한국의 농지개혁이 실패로 끝났던 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요구에 대한 국내 지주계급의 대응에 의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자본의 산업자본화와 농업의 資本制的 經營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再版 小作農化’를 가속화하는 결과

12) 金泳鎬, 『東アジア工業化と世界資本主義』, 東洋經濟新報社, 제9장, 1989. 金教授는 이러한 구조를 美·日·韓國의 三角構造로 인식하면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한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연속적 구조를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13) 李鍾燠, ‘한국자본주의 형성의 특수성’, 金炳台 등 11人 著,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98쪽 참조.

14) 농지개혁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견해는 한국의 경우로는 朱宗桓, 金俊輔, 일본의 경우로는 櫻井 浩를 들 수 있다.

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¹⁵⁾ 말하자면 한국의 농업부문은 세계자본주의에 변형된 형태로 접합되었고, 한국 내의 水準간에도 畸形化된(脫骨的) 接合을 이루게 된 것이다.

3. 三者同盟의 成長期(周邊에서 半周邊으로의 進入 試圖期: 1962-1981)

한국의 공업화 계획은 국내 경제구조의 자본주의적 '심화'의 토대 위에서 세계경제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의 過剩資本과 결합됨으로써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 한국의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가속화된 것은 이러한 국내적 여건(토대)의 성숙과 세계경제의 과잉자본 그리고 東西冷戰體制下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反共의 보루로서의 地政學的 戰略이라는 삼위일체적 조건 속에서 가능하였다. 이것은 거의 "우연의 일치"이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제분업구조에 주변부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한국으로서는 공업화 전략으로 「輸出指向工業化戰略」이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었다.

한국의 공업화 추진은 수량적으로는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지만, 세계체제론적으로는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국제분업상의 지위변동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 과정에서는 국가의 국민동원력이 절대적 요소가 되며, 결국 강력한 국가의 탄생이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신흥공업국의 출현을 「世代論」으로 설명하고 있는 金泳鎬 教授의 「第4世代國家群」의 공업화 특징이 國家/外資/國內大資本의 三者同盟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⁶⁾ 당시 한국 자본주의는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삼자동맹을 위한 모든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제1차 -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특징을 위계적 국제분업구조에서 지위변동을 위한 '輸出指向의 三者同盟의 工業化'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국가주도적 수출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주목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금융과 실질적인 Negative 이자율에 의

15) 崔龍浩, 前掲書, 568쪽 참조.

16) 金泳鎬, 前掲書, 61쪽 참조.

한 자금공급,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二重穀價制와 勞動三權의 통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둘째로는 外資의 役割이다. 낮은 국내 저축율을 통한 자금조달로는 자금수요에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지불보증에 의한 외자도입은 이를 충족시켰지만 동시에 국내외 이자율 격차로 인한 差額所得을 발생시키는 外資로의 接近可能性 그 자체가 엄청난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자본의 도입은 현금 도입이 아니라 설비, 플랜트(Plant)의 도입 그리고 부품의 도입과 같은 제품의 도입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며 혹은 기술자 및 技術顧問團 등 人的 요소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술의존이 수출지향적 공업화와 연결되면 수출을 위한 생산품이 국내수요시장과 분리된 채 선진국 시장과 연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시장과 기술과 자본재와 부품의 해외의존을 심화시키는 주변적 경제구조를 재생산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는 국내 大資本의 육성이다. 물론 이것은 수출지향산업의 육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국제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의 확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동시에 국내 정치권력의 物的 土臺와도 연관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대자본은 국가부문과 연결되면서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과 저렴한 고도 유순한 無限의 勞動力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분업의 下流部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국내 대자본이 국내의 중소자본을 排除하고, 오히려 海外部門과 연결되면서 국내 중소자본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가-대자본-외자의 三者가 동맹하여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고도 공업화라는 성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삼자동맹 그 자체가 외자 의존형 개발독재이며, 자본축적이 노동탄압에 의한 초과착취에 의존하고 있었고, 시장과 자본재 및 기술이 중심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변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반주변부로의 編入을 위한 삼자동맹형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 추진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업화 전략 그 자체가 가지는 성격에 의해 주변성이 강화되고 있었다. 당시의 성장과 주변성은 바로 銅錢의 兩面이었다.

4. 半周邊部로의 進入期(1982-)

韓國 資本主義가 半周邊部로 進入한 것이 1982년경이었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크게 세가지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선 첫째로는 한국 경제의 민주화와 민영화의 경향이다. 1982년을 전후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은행의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은행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에 근접하게 되었고, 정책금융의 규모도 축소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예컨대 연구개발투자지출 총액 중에 정부부담의 비율이 1980년 이전이나 1980년에는 80-68%이었으나 1981년에는 59%, 1982년에는 52%, 1983년에는 38%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20%선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1982년을 전후하여 반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한국 자본주의가 개발독재라는 방식으로서는 더이상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압력이 존재한다¹⁷⁾, 또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진입함에 따른 국민동원력의 이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한국 자본주의가 반주변부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또다른 논거로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분업상의 下流部門이나 雜工程部門이 국내에서의 고임금 압박이나 환경비용 압박 등에 의해 이윤이 압박(squeeze)을 받음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198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은 국제분업의 서열에서 중간에 위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국제분업에서 반주변부의 지위는 중심부에 대해 국제하청이나 수직적 분업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심부와와의 분업관계의 효율화를 위해 주변부와와의 국제하청이나 수직적 분업관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1980년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을 반주변부로의 진

17) A. Lipietz, 『기적과 환상』, 한울, 1992, 제5장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스페인 그리이스 등의 유럽 NICs의 독재정권 붕괴를 이와 같은 논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내수시장의 확대이다. 후술하겠지만 1982년부터 수출지향적이고 국제화된 산업마저도 내수중심의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실질임금의 지속적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변부의 특징인 초과착취와 해외시장 의존구조가 완화·변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공업화의 성공으로 인해 엄격한 위계적 국제분업의 사다리를 한 단계 올라가는 데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주변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이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붙어다니는 '연속'의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속성이 상존하는 '연속 속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이 '주변'이라는 특성을 완전히 극복하는 '변화 속에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變化와 連續 : 1980년대를 중심으로

이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 한국 자본주의가 1982년경을 전후하여 반주변부로 진입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우리는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몇가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변화는 '반주변'으로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주변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연속 속의 변화'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1. 蓄積構造의 變化와 連續

한국자본주의의 변화를 검토하는 출발점으로 한국 사회의 지니(Gini)係數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表 3>이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추세는 한국에서의 공업화를 통한 성장이 초기에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다가 다시 완화되는 逆U字 假說을 따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완화되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여 민간 저축량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간 저축률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30%의 높은 민간 저축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국민총소득 증대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소득의 상승에 동반된 所得不平等의

緩和는 內需市場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總貯蓄率의 상승은 - 비록 미약하지만 - 國內 資金動員力의 上昇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表 3〉韓國의 GINI係數와 民間貯蓄率의 變化推移

年 度	1965	1967	1969	1970	1978	1984	1988	1989	1990
GINI 係數	0.384	0.444	0.395	0.353	0.326	0.305	0.298	0.302	0.297
國內貯蓄率(%)	8.3	7.3	12.9	12.0	24.6	22.8	30.0	27.0	27.2

資料 : 李廷雨(1991)에서 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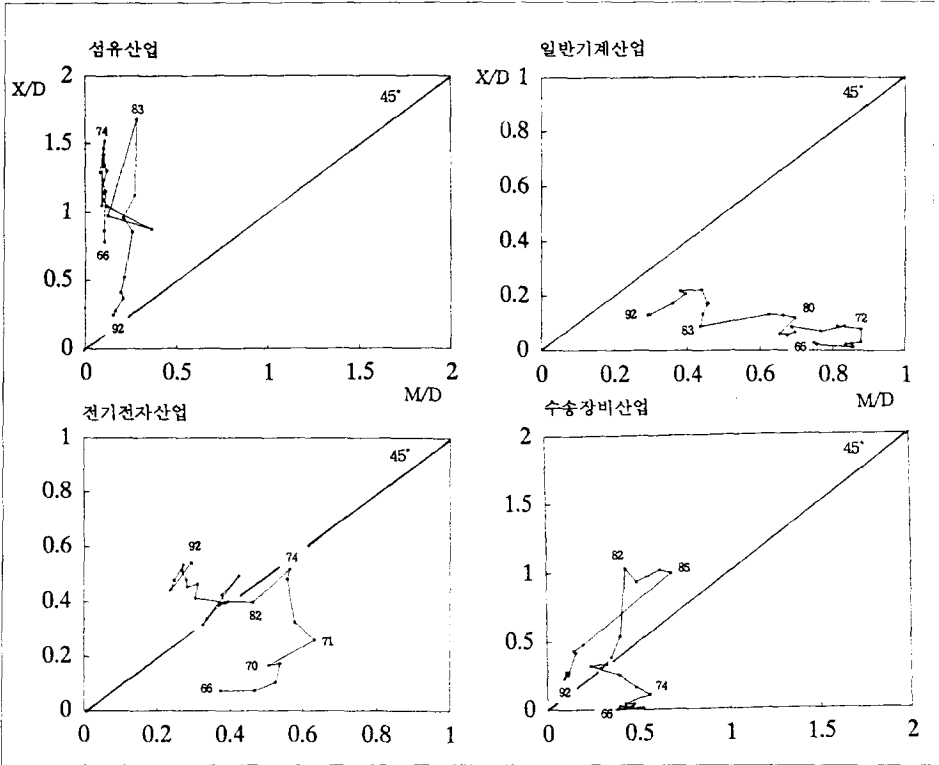
이것은 국내 산업의 자본축적의 구조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공업화 전략이 테일러주의적 노동편성에 기초한 수출지향에 있는 한 이윤실현의 場이 외부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공업제품은 처음부터 국내 소비자의 기호와는 무관한 중심부 소비자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생산 규모도 역시 國內 市場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內需市場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불황과 맞물려 한국 산업의 자본축적 구조에 모종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윤 실현의 場으로서 內需市場의 중요도가 외부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1〉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1982-4년도부터 이러한 轉換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산업의 자본축적이 외부시장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1982-4년경 부터는 국내시장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산업은 1974년을 전후로 하여 일차적인 수입대체와 내수시장의 확보 경향을 보이다가 1982-4년 이후로 이러한 경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에 따라 수입의존을 축소(기계산업)시키거나 수출의존을 축소(섬유산업)시키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전자산업 및 수송기계산업의 경우는 수입의존형에서 수출지향형으로 구조전환을 시도하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인 요소는 實質賃金의 상승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實質賃金 上昇率은 1970년대를 통

〈그림 1〉 韓國의 內需市場의 變化



資料: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經濟企劃院, 各年度の資料에 의하여 계산.

註: D=國內需要, X=輸出需要, M=輸入需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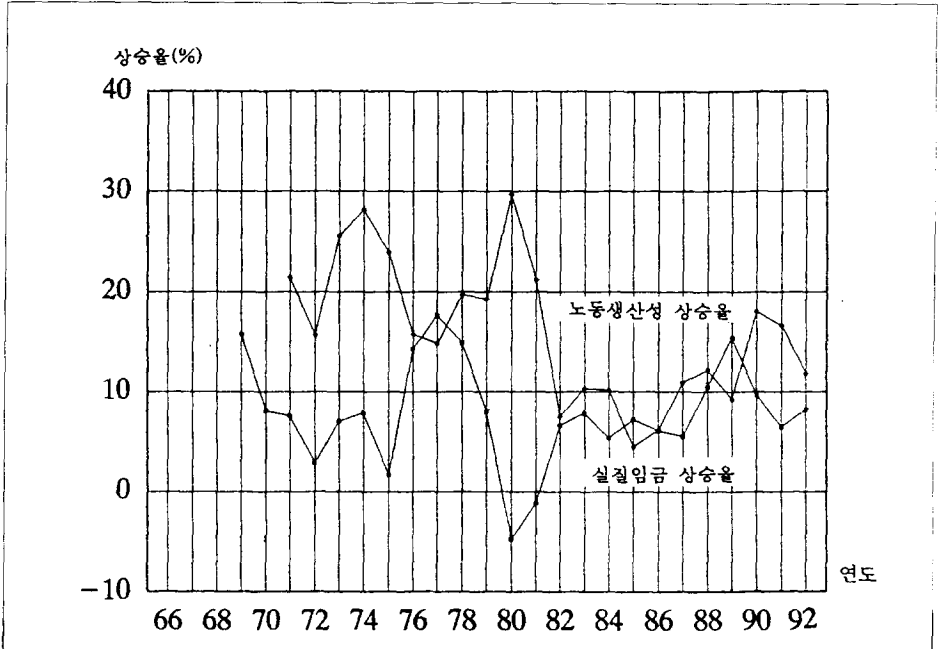
하여 심한 폭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을 보이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는 안정적인 상승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근로자가 勞-使 賃 金協商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얻어낸 결과일 것이다. A. 리피에츠는 이 현상을 한국이 주변부 국가에서 반주변부 국가로 진입한 징후로 해석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연속'의 구

18) 이것을 내포적 축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內需市場의 존재만으로 內包的 蓄積體制가 구축된 것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한적 의미에서의 정의이다. A. Lipietz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를 「周邊部的 포드주의」로 정의한 바 있지만, 후술하듯이 한국은 주변부적 속성을 연속적으로 지니고 있다.

조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내수시장의 확대구조는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1970년대 말 다시 외향적이 되었다가 1982년을 전후로 다시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순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이처럼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핵심생산기술을 외부에 의존한 채 상품시장만을 내부화함으로써 내포적 축적구조를 달성하는

<그림 2> 製造業의 實質賃金 上昇率과 勞動生産性 上昇率의 推移 (단위: %)



資料: 『經濟統計年鑑』, 韓國銀行,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經濟企劃院 각 연도에 의해 계산.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1970년대의 구조가 1980년대에도 연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연속의 구조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여기서 특히 한국 제조업의 實質賃金과 勞動生産性간의 對稱構造의 連續性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實質賃金의 상승은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폐쇄경제 구조 안에서만 보더라도, 증가된 국내수요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공급 확보를 위해서 기업은 생산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短期的으로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遊休設備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동률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물론 현실적으로

는 兩者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實質賃金の 상승은 勞動生産性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개방경제구조에서도 이러한 논리는 여전히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한국 제조업의 경험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실질임금 상승의 논리이다. 한국 제조업의 임금상승은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환원하는 '分配의 論理'라기 보다는 착취의 강화와 착취당한 것의 쟁취라는 '鬭爭의 論理'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틀 안에서는 임금상승과 노동생산성은 대립적 관계를 가지게 마련이다. 임금의 상승은 투쟁의 산물이 되고, 투쟁은 노동의 생산성을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실질임금의 상승율과 노동생산성의 상승율 간에는 대칭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1982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對立的 關係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989년 이후에는 다시 대립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한국의 勞-使對立關係의 連續的 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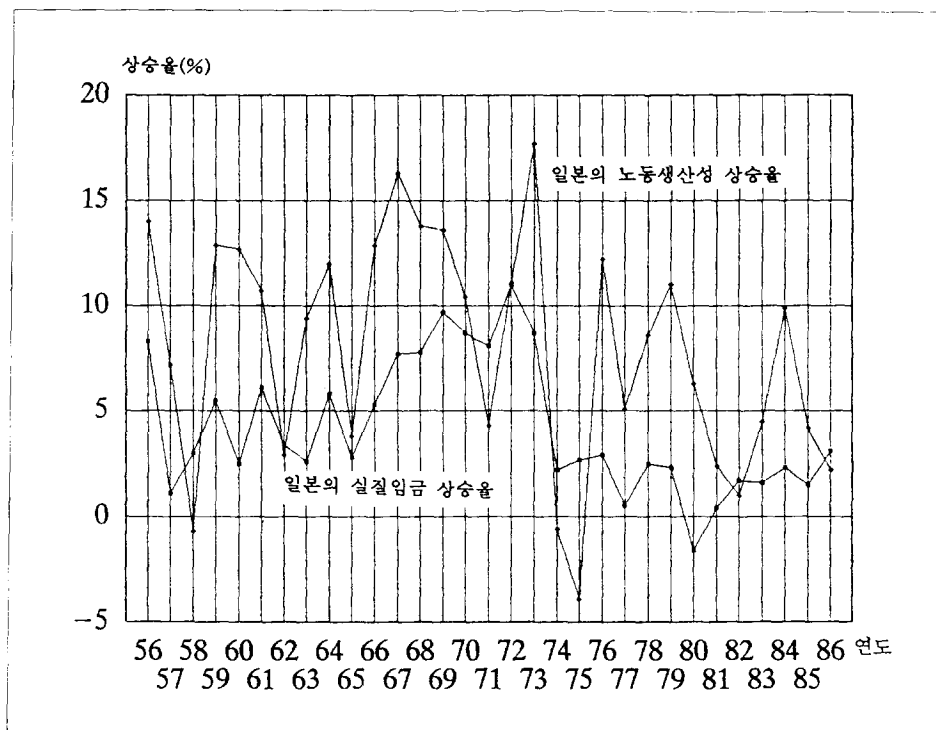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實質賃金の 상승이 勞動生産性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構造의 論理이다. 勞-使의 對立的 關係는 勞動者를 消耗의 要素로 사용하는 경향을 낳는다. 이 구조 안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숙련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作業者에 대해 가능한 한 제한적인 自律權만을 부여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진행되는 한 勤勞者의 熟練 蓄積은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使用者는 作業場을 통한 技術革新보다는 海外技術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연속적으로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매년 임금상승율을 결정하는 '春闘'가 勞-使間의 '연결교섭(connective bargaining)'의 성격을 보이면서 제도화되고 있다. 일본의 임금교섭은 고정적 부분과 변동적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고정적 부분에는 '年功的' 요소를 품고 있어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면, 변동적 부분에는 보너스나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어 경기변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春闘'는 이 두 부분의 구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年功的' 요소는 노동자로 하여금 작업에 전념하게 하고, 회사는 그 댓가로 실질임금상

승을 양보한다는 것이다.¹⁹⁾ 바로 여기에 일본 특유의 내부노동시장이 작동하고 있어, 실질임금상승이 숙련형성·기술축적을 기초로 하여 생산성 상승으로 연결되는 ‘現場主義’가 존재한다는 것이다.²⁰⁾

〈그림 3〉에서 보듯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율과 노동생산성 상승율간의 同行構造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림 3〉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율과 노동생산성 상승율의 차이



자료: B. Coriat, 『逆轉の思考』(1992), p.99. 재인용.

결국, 한국 기업은 實質賃金 상승이라는 높은 비용을 치루고도 그것이 生産性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변화 속에서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19) B. Coriat, *Penser A L'envers*, 1991 (日譯:『逆轉の思考-日本企業の労働と組織』, 花田昌宣, 齊藤悦則(1992), p.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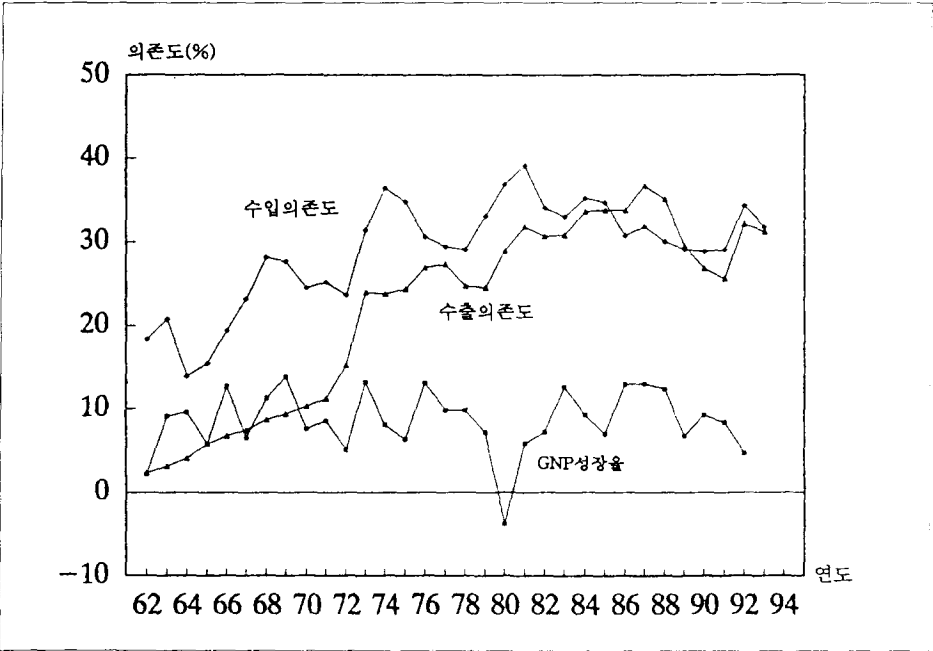
20) 安保哲夫, 『日本的經營・生産システムとアメリカ』, モネルウァ書房, 1994, p.5. 참조.

러한 1980년대의 내수확대에 의한 상품시장의 내부화는 한계를 내포한 변화인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와 연속의 구조는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만 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다음 項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2. 國際分業構造의 變化와 連續

앞의 절에서 살펴 본 바대로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집합과 국내 경제구조의 照應으로 인한 자본주의적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국제분업구조의 반주변부로 효과적으로 편입되었다. 세계경제의 냉전질서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反共戰略에 의한 미국시장의 개방, 오일달러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자금의 無限 供給 등이 ‘우연의 일치’를 이루어, 주지하듯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의 持續的·壓縮的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림 4〉 韓國의 輸入依存도와 輸出依存도의 추세



資料: 『경제통계연보』, 韓國銀行, 『무역통계연보』, 한국무역협회, 各年度 資料를 사용.
註: 輸入依存度(%) = 輸入額 / 總產出額(×100)의 산업별 平均,
輸出依存度(%) = 輸出額 / 總產出額(×100)의 산업별 平均.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無媒介的으로 單線的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엄격한 위계적 국제분업구조에 編入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것은 국내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동시에 한국의 대외의존(수입의존)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을 보아서도 간단히 알 수 있다. <그림 4>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1960년대 공업화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축적구조는 대외의존적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GNP를 상승시키기 위해 수출을 증가시켜야 했고, 수출증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계류 및 부품의 수입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同伴的 확대구조가 1980년대 초반을 경유하면서 수출률은 계속 신장되면서 수입의존도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한국은 일정 수준의 내적 자립기반의 구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심도있는 연구를 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로 1980년대 초반(1982년)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주의는 일종의 질적인 불연속점, 말하자면 자본축적의 내포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혹은 주변부 자본주의에서 반주변부 자본주의로 단계 변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1980년대 초반 이후의 GNP의 지속적 상승에 대해 해외의존의 정도는 정체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 역시 內需市場의 확대를 간접적으로 示唆하는 현상일 것이며, 동시에 部品이나 設備의 國產化가 상당 정도 진척된 결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한국 산업의 生産誘發 係數와 輸入誘發 係數의 변화추세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表 4〉 生産誘發係數와 輸入誘發係數의 變化

年 度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5	1986	1990
生産誘發係數	1.47	1.46	1.54	1.54	1.75	1.77	1.77	1.73	1.77
輸入誘發係數	0.20	0.26	0.29	0.28	0.30	0.28	0.27	0.27	0.24

資料：韓國銀行, 『産業聯關表』, 各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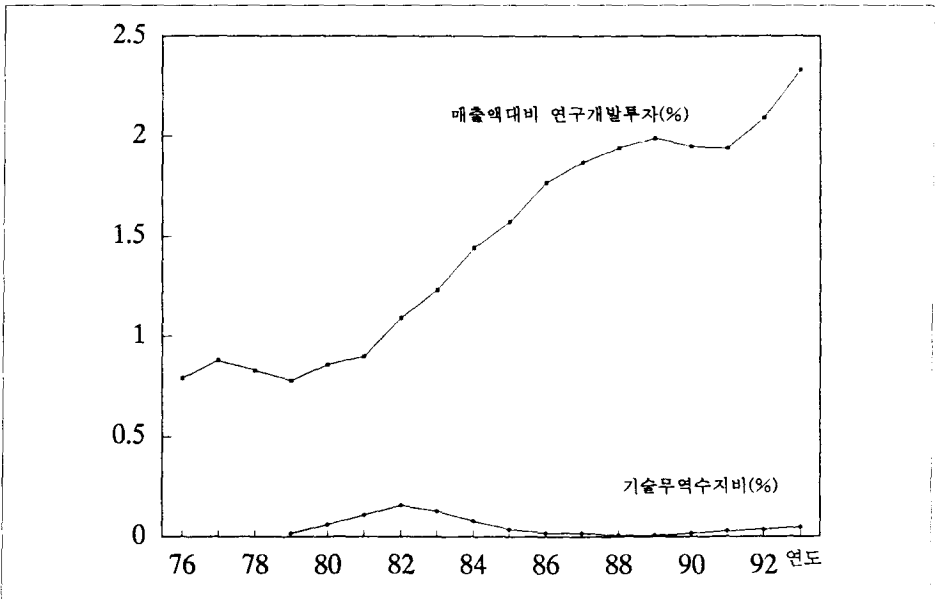
〈表 4〉는 이 두 계수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生産誘發 係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산업간의 연결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그러나 輸入誘發 係數는 1980년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로는 하락하고 있어, 部品이나 設備의 輸入을 통해 國內의 수요증가를 실현하는 정도가 점차 높아지다가 1980년을 기점으로 反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 절의 실질임금과 내수시장의 확보라는 점과 관련해보아 1980년대 초반에 한국 경제의 전개에 質的인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의존도 및 수출의존도가 30% 이상의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대외의존적 특성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대외의존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도 역시 학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과학·산업 기술의 해외의존성이다. 部品이나 設備의 國產化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海外依存性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 측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Dos-Santos가 20세기 후반 世界經濟에서 開途國의 從屬性은 産業技術的 從屬이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자본주의 세

〈그림 5〉 韓國의 研究開發投資와 技術貿易收支比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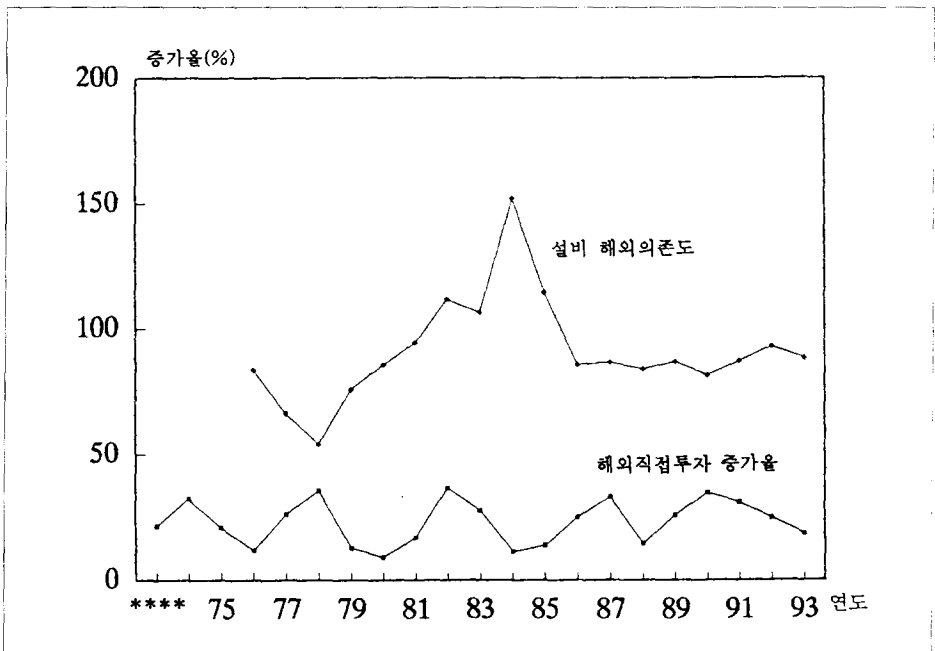


資料: 『科學技術年鑑』, 科學技術處, 各年度.

註: 技術貿易收支比 = 技術輸出額 / 技術輸入額.

계경제의 운동원리에 예외가 아님을 <그림 5>는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財界나 政府는 경제자립을 위해서는 技術의 自立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研究開發部門에 投資를 집중하고 있다. 그것 역시 1982년을 前後로 하여 일어난 중요한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海外技術依存度는 1982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1982년을 기점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기술로는 구조 고도화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필요한 尖端 新技術을 해외로부터 급속히 도입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원인이 이 현상의 지배적인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逆으로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 기술의 해외의존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의 '반주변부'적 지위의 연속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한국의 해외투자 증가율과 설비 해외의존도의 증가율 추세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한국무역협회, 『貿易年鑑』, 산업은행, 『조사월보』.

주 : 해외투자 증가율은 순투자누계액의 증가율, 설비 해외의존도 = 설비(자본재) 수입액 / 설비투자액.

다른 하나는 과학·산업기술능력이 체화된 생산설비재의 해외의존성이다. 기술의 해외의존성이 설비의 해외의존성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겠지만, 한국의 대외투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또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전략은 한국 제조업의 자기재생산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된다. 생산수단의 자립적 공급구조는 내포적 축적구조를 구축하는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전략은 1980년대 초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을 불러왔고 산업부문에 따라 자본과잉이 발생하여 자본의 해외진출이 급진전되었다. 한국의 해외투자의 증가추세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자본재 재생산 구조의 구축을 완료하면서 비롯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오히려 이것은 국제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국내 일부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낡은 산업의 해외이전과 신산업의 수입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 6>의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설비재 수입비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해외투자의 진전과 함께 해외설비의 수입이 병행하여 진행되는 현상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의 성과가 한국 공업의 구조 고도화와는 일정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공업고도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설계, 디자인, 품질관리기술 등 제1부문 기술)의 근원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한국 산업의 기술능력의 주변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변부 포드주의의 주변성이 가치실현의 場(내수시장의 확보)이라는 측면에서는 극복되었으나 과학기술의 공급 측면에서는 連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가 '독점강화'의 속성을 보이면서도 '종속심화'의 현상을 동시에 노정시키는 것²¹⁾도 이 때문일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한국은 開港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接合되

21) 정윤형 감수, 한국사회연구소 지음, 『한국경제론』, 백산서당, 126-140쪽 참조.

면서 국제분업구조의 주변부로 통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는 前資本主義의 樣式들의 온존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제분업의 요구와 국내 대응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1962년에 시작된 반주변부로의 진입전략이 1982년경에 와서 본격화되어, 최근 한국 자본주의는 질적인 불연속을 경험하면서 半周邊部로의 진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1982년경에는 국제화된 수출·입 지향적 산업들에게서조차도 안정적인 내수화 경향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경향은 1986년의 3저호황이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은 산업민주화 등의 요인에 의해 더욱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연속적 속성이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대내적으로 노·사간의 대립적 구조의 連續性이다. 이것은 실질임금 상승율과 노동생산성 상승율간의 對稱構造에서 확인한 바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공업화가 중소기업 배제형, 노동자 소외형의 '수출 지향적 3자동맹전략'의 필연적 결과로 생각된다.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기술적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주변부 성격의 連續性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력이 기술의존의 심화로 연결되는 구조 하에서 주변에서 반주변으로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 자본주의가 21세기에 다음의 중심부 단계로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보다 구조적이고 집약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포섭하는 개발전략이 요구된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노·사간에 팽배한 階級論的 對立의 틀을 극복하여 노사공존의 논리틀('Mutual Gains')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의 압력을 생산성 상승·실질임금 상승·국내시장 확대라는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임금압박이 이윤상승으로 연결되는 '逆임금·이윤압박' 코스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기에는 명실공히 정치적 민주화와 산업 민주화의 실현으로 연결되는 복잡하고도 지난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기술 자립화의 길이다. 매출액 대비 R&D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비는 하락하고 있다.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재의 해외도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반 기계재의 수입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R&D투자의 전략이 보다 조직적

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에서의 생산활동이 노동자의 기술 축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나 기업간·산업간의 기술지식의 정보가 유연하게 유통되는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내 요인의 해결만으로 달성될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의 국제기술이전질서의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예컨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기술이전질서만 보더라도 소위 韓·日간의 기술 '부메랑 효과'는 단히 세계의 논리이며, '日本型 技術移轉'의 논리도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를 전제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중반의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우리는 한국 경제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 '연속 속에서의 변화'가 아닌 '變化 속의 變化'를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 구조의 전환, 게임물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朴玄採, 『韓國經濟構造論』, 일월서각, 1986.
2. 安炳直, "日帝 植民地の 經濟的 遺産과 民族解放의 意義", 朴玄採 外 3人 編, 『韓國 經濟論』, 까치, 1987년.
3. ———, "開港과 經濟的 自覺", 『韓國經濟 33課題의 認識』,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4. 李廷雨, "한국의 부, 자본이득, 소득불평등", 『經濟論集』,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91, 6.
5. 李鍾燾, "韓國資本主義 形成의 特殊性", 金炳台 등 11人著,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돌베개, 1981.
6. 정윤희 감수, 한국사회연구소 지음, 『한국경제론』, 백산서당.
7. 朱宗桓, 『韓國資本主義史論』, 한울, 1988.
8. 崔龍浩, '韓國 資本主義의 展開過程', 『韓國資本主義의 政治經濟學的 研究』, 韓國 精神文化 研究院, 1988.
9. 韓國銀行, 『產業聯關表』, 각년도.
10. ———, 『經濟統計年報』, 각년도.
11. 科學技術處, 『科學技術年鑑』, 각년도.
12.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각년도.

13. 金泳鎬, 『東アジア工業化と世界資本主義』, 東洋經濟新報社, 1989.
14.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1942.
15. 本多健吉, ‘世界經濟システム論と接合理論’, 『經濟學雜誌』, Vol. 89, No. 1, 1988. 5.
16. 櫻井 浩, 『韓國農地改革の再檢討』, アジア經濟研究所, 1971.
17. G. Arrighi & J. Dangel, “The Stratification of the World-Economy : Exploration of the Semiperipheral Zone”, *REVIEW*, Vol. 5, No. 1, pp. 9-74.
18. C. Chase-Dunn, *Global Formation : Structures of the World-Economy*, Basil Black well, 1989.
19. B. Coriat, *Penser A L'envers*, 1991, (日譯: 『逆轉の思考-日本企業の勞動と組織』, 花田昌宣, 藤悅則, 1992).
20. A. G.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Monthly Review Press, 1967.
21. A. Lipietz, *Mirages et Miracles*, 1985, (『기적과 환상』, 金泳鎬 監修, 金鐘翰 外譯, 1992, 한울).
22. A. Poster-Carter, “Can We Articulate Articulation”, John Clammer (ed), *The New Economic Anthropology*, MacMillan Press, 1978.
23. P. P. Ray, “The Lineage Mode of Production, Critique of Anthropology”, *Economy and Society*, Vol 2. No. 3, spring, 1975.
24. I. Wallerstein, *The Morden World-System*, Vol. 1, AP, 1974.